

IV.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의 활용 현황, 향후 금융여건 변화 등에 따른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검토 배경

2. 자영업자대출 증가 현황 및 평가

3.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점검

4. 시사점

2. 자영업자대출 증가 현황 및 평가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월말 현재 960.7조원²⁾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운영자금 조달 수요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동 기간중 가계 및 기업 신용증가율(각각 16.2% 및 23.7%)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된 금융지원조치³⁾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1. 검토 배경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은 소득 및 매출 부진에 대응하여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¹⁾을 확대하여 자금난을 해결하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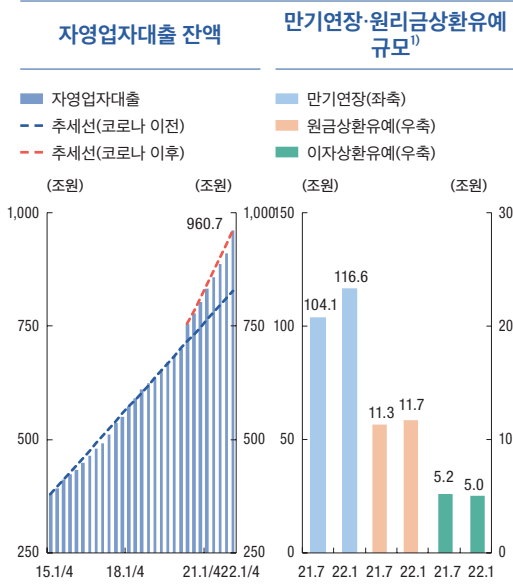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이전(2015년 1/4분기~2020년 1/4분기)의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2022년 3월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추정치(약 828.2조원)보다 약 132.5조원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V-1).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시점(2022년 9월)도 다가옴에 따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업권간 부실전염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1) 본고에서는 가계부채 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통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비슷한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나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취업자(통계청)중 비임금근로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개념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가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2) 이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개인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으로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한편,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따라 자영업자 식별 단위가 개인(가계부채DB, 국세통계 등), 가구(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사업체(소상공인실태조사 등) 등으로 다르다.

2) 2022년 3월말 자영업자대출은 사업자대출 625.1조원 및 가계대출 335.6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비중은 38.8%, 전체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19.1% 수준이다.

그림 IV-1. 자영업자 대출 및 금융지원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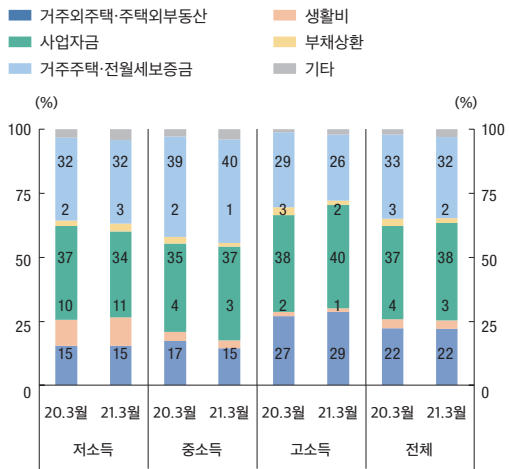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주: 1) 대출잔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가. 자영업자대출 활용 현황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대출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중 저소득 가구는 주로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늘린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사업 또는 부동산 등 투자를 위해 대출을 확대시킨 것으로 파악된다.⁴⁾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의 코로나19 전후 대출용도 변화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하위 30%) 가구는 생활비 마련 또는 부채상환 목적의 대출 비중(잔액 기준)이 높아지고, 고소득(상위 30%) 가구는 사업자금 및 거주외주택·주택외부동산 마련 목적 등의 대출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2).

그림 IV-2. 자영업 가구의 금융부채 용도별 비중¹⁾²⁾



주: 1) 금융부채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재산출
 2) 금융부채 잔액 기준
 자료: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3)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조치, 신규대출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였다. 특히,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조치는 2020년 4월 시행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료 시점이 4차례 연장(20년 9월말→21년 3월말→21년 9월말→22년 3월말→22년 9월말 종료예정)되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내용	시행시기	규모
만기연장 및 원리금유예	20년 4월~22년 9월(예정)	133.4 ¹⁾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20년 1월~20년 5월(종료)	13.7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20년 5월~21년 12월(종료)	7.8
희망대출 플러스	22년 1월~	10.0 ²⁾

주: 1) 2022년 1월말 대출잔액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포함
 2) 공급목표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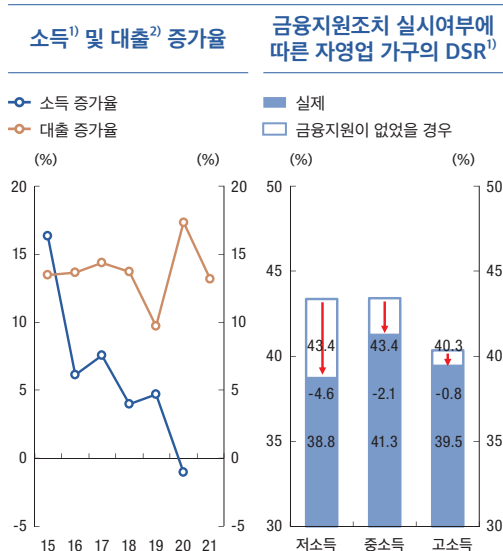
4) Park and Kim(2018)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15년중 고소득 가구는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차입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는 소비를 위해 차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도 코로나19 기간중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나. 자영업자대출 확대의 효과

자영업자대출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후가정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금융지원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와 비교하여 2021년말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추정해보면, 2021년말 저소득(하위 30%) 가구의 DSR은 38.8%로 금융지원이 없었을 경우(43.4%)에 비해 4.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고소득(상위 30%) 및 중소득(40~70%) 가구의 DSR도 각각 0.8%포인트, 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IV-3).

그림 IV-3. 자영업자 소득·대출 및 금융지원 유무에 따른 DSR 비교



주: 1) 종합소득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2) 가계부채DB로 식별한 자영업자주의 대출

자료: 국세청,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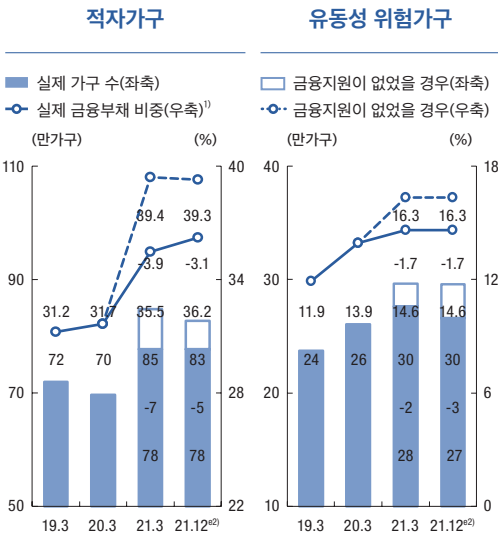
주: 1) 2021년말(20년 3월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기준

자료: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같은 방식으로 2021년말 적자가구와 유동성 위험가구⁵⁾의 변화 정도를 추정하여 보면, 적자가구는 금융지원조치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약 5만 가구 감소(83만 가구 → 78만 가구)하고, 유동성 위험가구는 약 3만 가구 감소(30만 가구 → 27만 가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IV-4).

5) Giordana et al.(2019), Karasulu(2008)을 참고하여 적자가구는 가구소득에서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값이 마이너스(-)인 가구로 정의하며, 유동성위험가구는 적자가구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유동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년 3월 24일) 「자영업가구 대출의 잠재적 부실 현황 및 시사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IV-4. 금융지원조치 유무에 따른 적자 및 유동성 위험가구 변화



주: 1)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 대비
 2)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금융부채 증감률, 소비지출증감률 등을 이용하여 추정(이하 동일)
 자료: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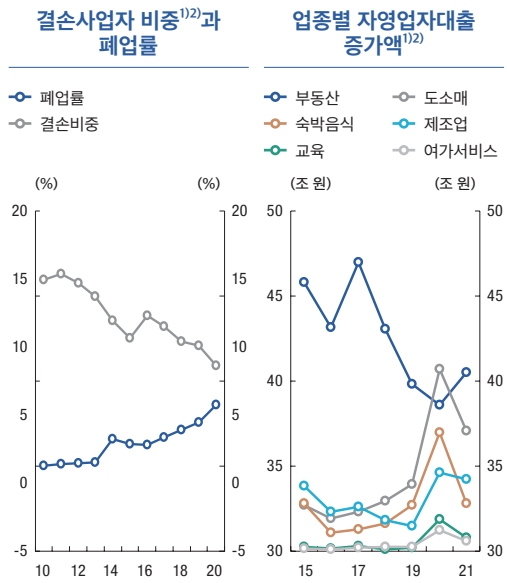
반면 자영업자대출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동산대출을 증가시키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IV-5).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이하 결손사업자)의 비중이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업종별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 기준) 증가 추이를 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던 2020년 중 크게 늘었다가 2021년에는 둔화된 반면, 부동산업⁶⁾의 경우 2020년까지 대출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21년 들어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부동산업 대출증가세 확대는 가계부문의 주택관련 대출 확대와 더불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그림 IV-5. 자영업자 결손·폐업 및 업종별 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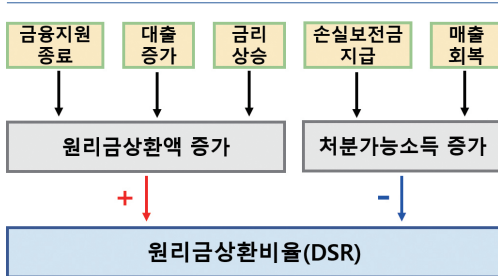
주: 1)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포함) 신고건수 중 결손 신고건수
 2) 개인사업자 기준
 주: 1)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2) 전년말 대비 증가액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자료: 국세청

6) 2020년 중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순증 규모(신규등록자수 - 폐업자수)는 25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순증 규모 53.8만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3.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점검

최근 자영업자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도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정부의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⁷⁾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요인 등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기 위해 금리 상승, 금융지원조치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보았다(그림 IV-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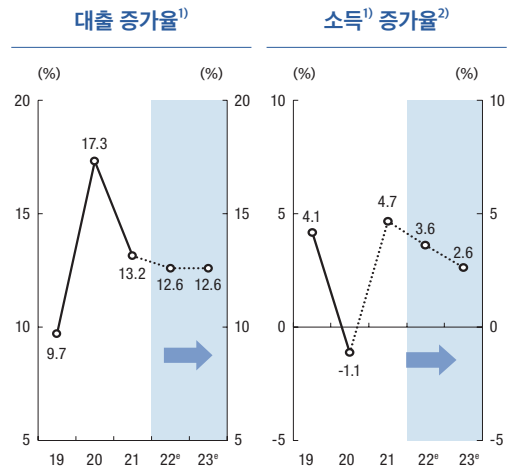
그림 IV-6. 원리금상환비율(DSR)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자영업자대출이 매년 코로나19 이전의 증가추세⁸⁾(12.6%)를 따라 늘어나고, 소득은 업종별 매출회복세, 한국은행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2022년과 2023년중 각각 3.6%, 2.6% 성장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 IV-7). 아울러 대출금리는 2023년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지

원조치는 2022년 9월 재연장¹⁰⁾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표 IV-1).

그림 IV-7. 자영업자의 대출 및 소득 시나리오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주: 1) 처분가능소득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금융여건, 정책변화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출금리가 2022년과 2023년중 각각 50bp씩 상승(시나리오 I)하는 경우, 금융지원조치가 2022년 9월 종료¹¹⁾(시나리오 II)되는 경우, 손실보전금이 2022년중 가구당 600만원씩 일괄 지급(시나리오 III)되는 경우 그리고 이들 충격이 동시에 발생(복합충격 시나리오)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7)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30일부터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하였다.

8) 2022년과 2023년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중 증가율을 적용하였다.

9) 2021년 자영업자 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였고, 2022년과 2023년중 자영업자 소득은 GDP 전망 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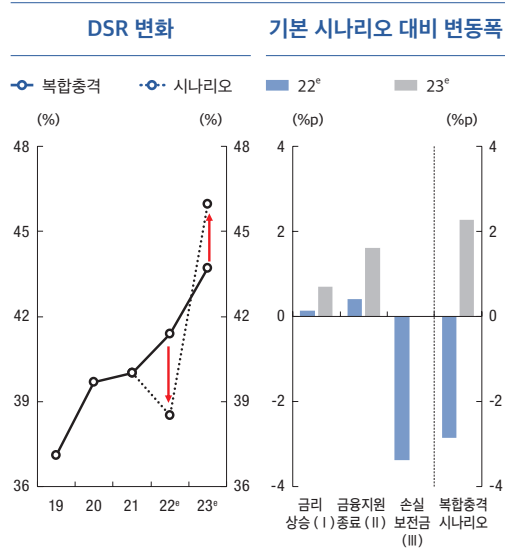
10)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실적 등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대출 중 13%가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표 IV-1. 주요 금융·정책 변수 시나리오

	기본	충격 시나리오			
		I	II	III	복합
■ 금리 상승 (매년 +50bp씩)	×	○	×	×	○
■ 금융지원 종료 (22년 9월)	×	×	○	×	○
■ 손실보전금 지급 (가구당 600만원)	×	×	×	○	○

먼저, 금리 상승(시나리오 I)은 자영업 가구의 DSR을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2022년중 0.1%포인트, 2023년중 0.7%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시나리오 II)는 자영업 가구의 DSR을 2022년중 0.4%포인트, 2023년중 1.6%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IV-8). 반면 손실보전금 일괄 지급(시나리오 III)은 자영업 가구의 DSR을 2022년중 3.4%포인트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복합충격 시나리오) 자영업 가구의 DSR은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2022년중 2.9%포인트 낮아졌다가 2023년중에는 2.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V-8. 복합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자영업 가구의 DSR 변화



자료: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이에 따라 자영업 가구의 DSR은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에 힘입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자영업 가구의 DSR은 2021년 40.0%에서 2022년 38.5%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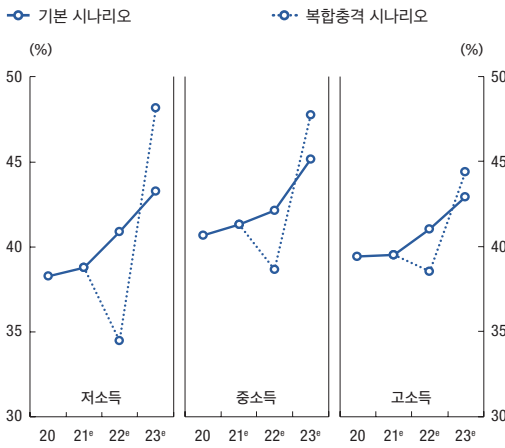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됨에 따라 채무상환부담이 일시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복합충격 하에서 2023년 자영업 가구의 DSR은 4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하위 30%) 가구의 DSR은 2022년 34.5%로 하락하였다가 2023년에는 48.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1) 금융지원조치 종료시 그동안 상황이 유예되었던 원리금은 5년간 분할상환되고, 만기연장 원리금의 경우 80%만 연장되고 나머지 20%는 5년간 분할상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2) (그림 IV-9). 또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손실보전금에 따른 부담완화 효과가 크고, 금융지원조치 종료 충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¹³⁾

그림 IV-9. 복합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소득수준별 자영업 가구의 DSR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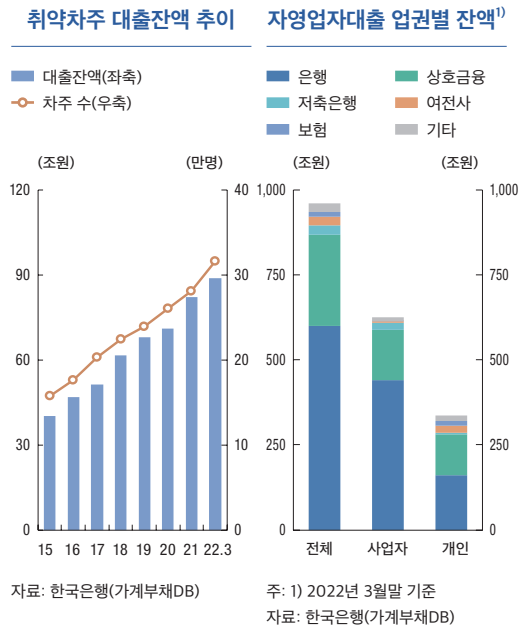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한편,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DSR 상승 등 자영업자의 채무상환위험이 증가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3월말 현재 취약차주¹⁴⁾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8조원으로 코로나19 직전(19년말 68.0조원)에 비해 30.6% 증가한 상황이며,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 동 대출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V-10). 아울러,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여러 금융업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특정 금융업권의 부실이 타금융업권으로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다.¹⁵⁾

그림 IV-10. 자영업 취약차주 현황 및 자영업자대출의 구성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주: 1) 2022년 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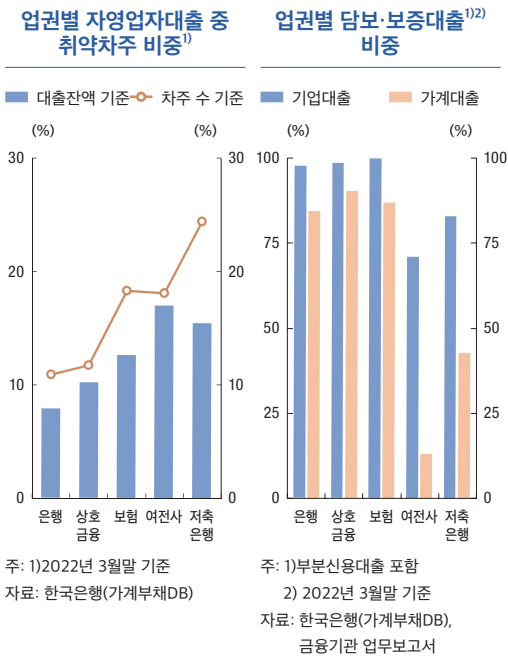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업권별로 보면, 은행 및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 단위조합)의 경우 대출잔액은 크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낮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높아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 증가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IV

- 12) 다만, 손실보전금 600만원 중 일부를 대출원리금 상환에 활용하는 경우, 2023년 저소득 가구의 DSR은 당초 추정치(48.1)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13) 손실보전금 지급은 저소득 가구의 DSR을 상당폭 하락(-7.5%포인트, 2022년중)시키지만, 고소득 가구의 경우 소폭 하락(-1.9%포인트)시키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융지원조치 종료는 저소득 가구의 DSR을 상당폭 상승(+4.2%포인트, 2023년 중)시키는 반면, 고소득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0.8%포인트)일 것으로 분석된다.
- 14)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지칭한다. 데이터 제약 등으로 인해 보고에서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를 고려하여 다중채무를 추정하였다.
- 15) 임진 외(2018)의 방법을 이용하여 두 업권에 동시에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을 식별하여 동 차주가 보유한 대출잔액을 선의 두께(숫자는 잔액)로 표시할 경우 다중채무 자영업자대출의 금융업권간 상호연계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은행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가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등에 추가 대출을 보유하는 등 은행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반면,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여타 업권에 비해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낮아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약화시 이들 기관의 자영업자대출부터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11. 금융기관 업권별 자영업자대출 관련 취약성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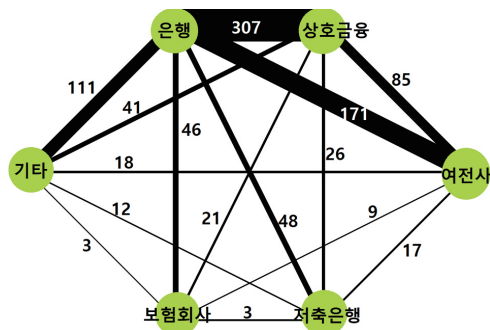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과 유동성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 지속은 장기적으로 부동산대출 확대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 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solvency support) 중심으로 전환¹⁶⁾할 필요가 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대출의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구조¹⁾

(조원)



주: 1) 2022년 3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단계적으로 종료¹⁷⁾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 소득이 회복된 자영업자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채무상환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업황개선 지원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유예¹⁸⁾만 종료하고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매출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

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¹⁹⁾, 폐업지원 및 사업 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배드뱅크)의 설립²⁰⁾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 선정, 채무재조정 방식 등을 설계함에 있어 차주의 구조적 취약성, 장래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16) IMF(2021)는 보고서(Staff Discussion Note)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위험 증가가 향후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유동성 지원에서 채무이행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21년 4월).
- 17) BIS(2020) 및 각국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던 호주, 홍콩 등도 유예조치를 종료하거나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통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호주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의 최대기간을 10개월로 한정하는 한편 지원조치를 종료(1차 : 20년 3월 시행, 21년 3월 종료)하였다가 필요시 추가조치(2차 : 21년 7월 시행, 21년 10월 종료)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홍콩은 유예조치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상환능력이 회복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의 일부를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18) 금융기관이 이자상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자산건전성 평가 등을 통해 향후 부실가능성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9)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0.7조원, 22년 5월 30일 의결)하였으며 2022년 10월부터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의 채무재조정 방식으로는 상시적 제도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과 한시적 제도인 배드뱅크 등이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과거 채무자 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배드뱅크의 경우 주로 정부 주도하에 마련된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매입대상 채권의 범위와 신청자의 채무감면 등을 결정하였다.

채권채무재조정 방식의 비교

	워크아웃	개인회생	배드뱅크(과거)
담당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정부 또는 민간주도
근거법률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상록수유동화(2003), 한마음금융(2004), 희망모아금융(2005), 신용회복기금(2008), 국민행복기금(2013) 등
조정내용	①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연체자): 원금감면 평균 44% ② 프리워크아웃(30~90일 연체자): 연체이자감면 ③ 연체전채무조정(30일 미만 연체자): 연체이자감면	원금감면 평균 60%	국민행복기금 원금감면 평균 55%
채무조정 정보공유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확정후 2년간 -프리워크아웃: 연체전채무조정:미등록	변제계획인가후 3~5년간	연체정보 해제 또는 "신용회복지원 중"으로 등록 후 성실납부 시 기록 삭제
소요기간	확정시까지 평균 2개월 소요	변제계획 인가까지 평균 6~9년 소요	-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오윤해(2014) 등

- 20) 김진 외(2015), 구정환(2012), 오종문 외(2019)에 따르면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된 채권·채무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부실자산을 처리하여 자산건전성을 회복하는 한편, 자영업자는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대출 관련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큰 만큼, 자영업자대출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정환(2012), “중소기업인을 위한 패자부활제도의 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21권 49호
- 김진·권대중(2015), “공적 부실채권정리기구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2호, p161-177.
- 오윤해(2014),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정책연구시리즈
- 오종문·윤성수(2019),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캠프,” 「KBR(Korea Business Review)」, 제23권 제1호, p99-125.
- 임진·김영도·박종상·박춘성(2018),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Coelho, Rodrigo, and Raihan Zamil(2020), “Payment Holidays in the Age of COVID: Implications for Loan Valuations Market Trust and Financial Stability.” 「FSI Briefs」, 8:1-10.
- Diez, Federico J., Romain Duval, Jiayue Fan, Jose Garrido, Sebnem Kalemli-Ozcan, Chiara Maggi, Soledad Martinez-Peria, and Nicola Pierri(2021), “Insolvency Prospects Amo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Advanced Economies: Assessment and Policy Options.” IMF Staff Discussion Note 2021/00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2022), “Approaches to Debt Overhang Issues of Non-financial Corporates.” February 22. <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P220222.pdf>
- Giordana, Gaston, and Michael Ziegelmeier(2019). “Stress testing household balance sheets in Luxembourg.” ECB Working Paper 2254, European Central Bank, Frankfurt.
- Karasulu, Meral(2008),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in Korea.” IMF Working Paper 08/25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Park, Ki Young and Soohyon Kim(2018), “Dispersion of Household Debt and Its Macroeconomic Implications: Evidence from South Korea,” 「경제분석」, 제24권 제1호, pp. 1-44.